

챔피언스시티 사업 '흔들' ... '더현대 광주' 일정은 그대로

총 30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차질에 광주시 재정도 빨간불 복합쇼핑몰 일정에 맞춘 도시철도와 BRT 건설 등 난항 예상

광주시 북구 임동 '챔피언스시티' 사업의 시공사 재선정 지연이 현실화하면서, 광주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더현대 광주' 개점 일정에 맞춘 도시철도와 BRT(간선급행버스) 건설 등 광천권역 교통대책 추진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 시행사가 추진하는 챔피언스시티 사업에서 확보할 예정인 공공기여금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주거복합1블록 1286억원, 주거복합2블록 1538억원, 랜드마크타워 176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납부하는 재원이다.

공공기여금은 착공일 기준으로 단계별 납부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1차분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301억 원)를 납부하고, 이후 13개월, 25개월, 37개월 차에 각각 10%씩 납부한 뒤 준공 1개월 전에 나머지 60%(1800억 원)를 납부하면 된다.

계획대로라면 주거복합2블록은 올 10월, 주거복합1블록은 내년 10월, 랜드마크타워는 2027년 2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재선정에 따라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당장 올해 안에 받아야 할 1차분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여금 지연의 가장 큰 문제는 광천권역 교통대책의 핵심 사업들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설비 6925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770억 원과 BRT 건설비 526억 원 가운데 총 3091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광주시가 제시한 공공기여 '현금 활용'의 우선순위는 상무광천선과 간선급행버스(BRT), 광천 그린로드-에코브릿지, 서림로-신안교 연결도로, 북구 장기미집행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상무광천선-BRT의 시비 부담분은 "시 재정 투입 없이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다. 공공기여의 입금 속도가

교통대책의 집행 속도를 정하는 구조다.

이 밖에도 광천 에코브릿지와 그린로드 조성사업비 180억 원, 서림로-신안교 간 도로 개설, 북구 장기미집행시설 설치비용 20%(600억 원) 등도 모두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일단 사업 지연에 대비해 자체 예산으로 선투입하거나 사업 연동 과제의 착수를 늦추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 재정 여건이 공공기여금 지연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대응, 도시철도 공사 장기화, 공원일몰제 부지 구매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특히 북구 서림로-신안교 간 도로 개설의 경우 더현대 광주 단지 내 도로와 연결하는 구조로, 더현대 광주 준공 일정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탓에 사업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공공기여금 지연 사태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챔피언스시티와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개발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재선정이 장기화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건설업체에서 수익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1군 업체들도 선뜻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도 단기 지연은 감수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장기 지연된다면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들이 전국 개발업체의 콘솔들이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 '올 뉴 챔피언스시티' 건설을 위한 모델하우스(사진 왼쪽 원형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도시형 AX 실증·제조AI 테스트 베드로 전남, 농수산·재생에너지·푸드테크에 AI 접목

지방시대위, 5급3특 전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5급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서 광주·전남 지역 발전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광주는 도시형 AX 실증과 제조AI(인공지능) 확산의 테스트 베드로 조성되고, 전남은 농수산·재생에너지·푸드테크에 AI를 접목하는 게 뼈대다. 광주와 전남을 미래산업으로 꼽는 AI를 통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광주, AI 혁신허브로 도약·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적 거점으로 발전한다.

정부는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AI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25년 AI 전략사업으로 153억원이 정부 추계에 반영되었으며, 첨단 3지구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 권역별 AX 연구·실증 거점과 제조AI 지원 체계(제조AI센터, 공정 시뮬레이션, 전문가·바우처 등)를 패키지로 추진하고, AX 선도산업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현장 흡수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주에는 'AX 실증밸리'(도시생활혁신·모빌리티·에너지 분야)가 축이 된다.

또한 K-반도체벨트 등 권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AI)을 가속한다. AI 특화 계약학과·부트캠프 확대로 인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등 지역 연구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거점으로 키운다.

기존 광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광공·광응용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화를 유도하고,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주력 업종에서도 AI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전남, 에너지전환 선도지역으로·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서 에너지전환을 선도한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운영·정비(O&M)와 수요관리의 고도화에 AI를 접목하고, K-농산어촌 모델과 연계해 생산·가공·유통을 데이터로 연결한다. 지역 푸드플랜, 농촌공간계획·빈집정비, 정주·돌봄 인프라가 묶여 '머무는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선해양 산업은 스마트야드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푸드테크·그린바

이오 분야 특화로 농수산·바이오 연계 생태계를 확장한다.

◇호남권 공동발전 기반 마련·광주와 전남은 권역 60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버스·BRT 활성화, 환승센터 확충, 농어촌형 DRT 확대, K-패스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호남고속철도 연장·서남해안 고속화 등 광역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광·의료·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해 권역 내 생활 품질을 끌어올린다. GTX급(x-TX) 광역급행철도는 필요 시 병행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재양성은 메가공유대학, 계약학과(산업학위제) 등 권역형 체계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과 실증 중심 R&D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급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론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사·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성장과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대통령 "검찰 무리한 항소·상고로 국민에 고통"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무리한 항소·상고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관하는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

이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됐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은 구민의 내일을 위해
북구의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